

# “국난, 정쟁 종단을 원원원 정치 해야”

(국민·興·野)

## 민주당 이낙연,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Win)·윈(Win)·윈(Win)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에 정쟁 자체를 호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정 정례 대화 재개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 ▲여야 간 비슷한 정책 공동 입법 등에 대해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이 대표는 “협치”에 대해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정책협치를 통해 정부 협치로 확대해 갈 수 있다”고 정의했다.

## “정책협치 통해 정부협치 확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 단호히 거부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어”

이 당대표 경선 당시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고 그렇지 않는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가 한국을 두고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하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한국을 모범국가로 보는) 그런 성적은 국민의 적극적 협력 덕분이고, 국민의 참여를 통한 성취였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며 “의료진과 방역 당국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일부 보수단체가 올해 광복절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명체 평화, 포용과 공존이 중시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승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건강·사회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준비, 성 평등 및 균형 발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건강안전망과 관련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공공의료체계 강화 ▲생명안전 기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국민취업제도의 조속한 정착 ▲기초생활보장제 확충 ▲전일 보육 책임 체계 조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 신산업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국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 구축 ▲스마트 공장 및 상점을 통한 기존 산업 생존력 제고 ▲데이터 거래소 설치 및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미래 차 및 분산형 그린 에너지 확산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4차추경, 피해 큰 업종·계층에 집중”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맞춤형 재난지원, 상황·형편 감안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 위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가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맞춤형 재난지원’을 골자로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맞춤형 재난지원’을 두고 역차별 우려가 나올 것에 대한 해명성 발언도 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 방침에 대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물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두루 이해해 주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지난달 1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신로터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포항지진피해 100% 지원 산업부, 특별법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 지원하되, 국비 80%·지방비 20%로 분담키로 했다.

피해자인정과 지원금 범위 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멸시효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방사청, 해군전술C41 성능개량 완료

실시간 지휘통제 작전성공역할 수행  
별도 운용 4개체계 1개체계로 통합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해군전술C41 성능개량사업을 업체주관(쌍용정보통신) 연구개발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C41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를 뜻하는 지휘통제통신체계로, 해군전술C41는 해군 작전사를 중심으로 감시정찰체계 및 각 군 C41와 연동된 실시간 지휘통제를 통한 작전 성공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군은 2007년과 2010년 각각 1·2차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번 해군전술 C41 체계 성능 개량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5년간 1472억 원이 투자됐다.

그동안 해군은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해군지휘통제체계(KNCCS), 디지털전문처리체계(DMHS), 실시간 문자망 등 4개 체계를 별도로 운용해왔다. 하지만 장비 노후와 분산 운용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량된 해군전술C41는 별도 체계로 운용되던 4개 체계를 1개 체계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1개의 단말기에서 모든 정보가 융합된 상황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휘통제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이번 성능 개량으로 3차원, 초고속, 고고도의 탄도탄 표적까지 실시간으로 해군의 전 부대에 전파·공유할 수 있게 됐다.

/문형철 기자 captinm@

## 세계식량가격지수 3개월 연속 상승

농식품부, 전월비 2.0% 상승 96.1p

세계식량가격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수준이 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올해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94.3포인트) 대비 2.0% 상승한 96.1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2% 상승한 수준이다.

식량가격지수는 FAO가 199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로 매월 작성해 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 100포인트가 기준이다.

올해 식량가격지수는 1월 102.5포인트, 2월 99.4포인트, 3월 95.1포인트, 4월 92.4포인트, 5월 91.0포인트로 떨어지다가 6월 93.1포인트, 7월 94.3포인트에 이어 8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 추세다.

육류·유제품 가격 지수는 지난달과 비슷하나, 곡물·유지류·설탕 가격 지수는 지난달과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올랐다. 육류는 7월 93.1포인트 대비 0.1% 상승한 93.2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9% 하락했다.

쇠고기와 가금육은 주요 생산지의 도축·가공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추이 둔화로 가격이 하락했다.

/한용수 기자

## 한·중·러·몽 ‘스마트농업’ 방안 논의

농식품부, 농업위원회 영상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북아 지역 한·중·러·몽 다자간 협의체인 광역무민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 제5차 농업위원회를 8일 영상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창립총회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며, 우리 측은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 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그동안에는 한·중·러·몽 정부대표가 역내 농업 협력 현황과 계획을 전반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이번에는 특별히 스마트농업에 초점을 맞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K-스마트팜 기술 현황과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고 동북아 지역 스마트농업 현황 분석과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된 상황을 고려, 역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제안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위원회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 초국경 동식물질병 통제, 과학기술 교류 등의 목표에 대한 성과 가시화를 위한 회원국 간 협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